

지역 현안 해결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국회 공조'

우범기 전주시장, 국회 등 찾아 핵심 현안 지원 요청

우범기 전주시장이 연초부터 전주 대도약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공조에 나서는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21일 국회 등을 방문해 김운덕 국토교통부 장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임, 전주갑), 이성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주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장(전남 영암무안신안) 등을 만나 전주시 핵심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 시장이 이날 요청한 주요 사업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광법 개정에 따른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국가 교통망 계획 반영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전주의 공간 구조를 재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1일 국회 등을 방문해 김운덕 국토교통부 장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임, 전주갑), 이성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주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장(전남 영암무안신안) 등을 만나 전주시 핵심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설계하고 전주를 100만 광역도시로, 약시킬 사업으로,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맞물려 신속하게 추진 해야 할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가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유치,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같은 굵직한 현안이 원활히 추진돼

야 한다"면서 "지역 정치권과 국회, 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바탕으로 전주의 대변력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AI · 첨단기술 중점' 산업 · 기업 · 민생 함께 성장한다

전주시 경제산업국, 신년브리핑 개최... 지역 산업 고도화로 기업 성장 · 일자리 창출 · 민생 경제 회복 추진

전주시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민생 안정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AI와 첨단기술을 중점을 둔 지역 산업 고도화로 미래산업기반을 다져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 경제산업국은 22일 시청 브리핑장에서 '2026년 신년브리핑'을 갖고 AI 기반 산업 혁신을 산업 정책 전반에 접목해, 산업 · 기업 · 민생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신년브리핑에는 AI와 신기술을 활용한 신성장산업과 기존 주력산업을 함께 끌어올리고 그 성과가 기업 성장과 일자리,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우범기 시장의 경제정책 기조가 담겼다.

시는 AI, 첨단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수소 · 탄소 · 드론 등 지역 주력산업의 역할을 재정립해, 기업 유치부터 기술 실증, 사업화, 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산업 성장 흐름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전주형 스마트 거점도시를 조성해 AI 기반 스마트 솔루션과 어반테크 창업을 확대하고, 덕진권역 G-Town에는 AI 가상융합 미래기술 실증 혁신센터를 구축해 자율주행, 로봇, 콘



전주시 경제산업국은 22일 시청 브리핑장에서 '2026년 신년브리핑'을 갖고 AI 기반 산업 혁신을 산업 정책 전반에 접목해, 산업 · 기업 · 민생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텐츠 분야의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그리고 나노 · 탄소소재 등 지역 강점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실증 · 사업화를 통해 첨단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R&D 인프라 연계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기업 중심의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자선운동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기반을 지속 강화하고, 금융교육 확대와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산업과 금융이 결합된 성장 여건을 넓히며,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 벤처기업 성장 공간도 확충한다.

시는 수소 · 탄소 · 드론 등 기존 주

력산업은 AI와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 산업으로 기능을 확장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가기로 했다.

먼저 수소 산업은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수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소놀이체험관 건립 · 운영과 친환경수소차 보급 등으로 수소산업 저변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탄소 산업은 산업통상부 소부장 기성 프리프래그를 토대로 UAM용 열기성 프리프래그를 국내화 공정과 재활용 탄소섬유 기반 고성능 복합재 실증을 본격화하고, 탄소제품 표준 · 인증 토 달솔루션 센터를 상반기 설계 완료 후 착공해 기업의 기술 검증과 시장 진입

을 지원한다.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신수요 산업 창출을 통해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의 외연을 적극 확장에 나갈 계획이다.

드론 산업은 기업 지원 정비 19종을 활용한 기술 지원과 신규 과제 발굴을 지속하고, 전주국제드론스포츠허브를 거점으로 교육 · 체험 · 기체 테스트를 연계해 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져 나간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전주사랑상품권 3,000억 원 발행과 희망더드림 특별보증 500억 원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골목명상점가 확대 및 골목상권 드림축제, 전라감영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남부시장 백년시장 육성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소담스퀘어 전주' 운영, 전주형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을 추진한다.

인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의 경제정책은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산업 전환 방향에 맞춰 전주형 산업 구조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AI와 신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민생으로 이어지는 경제 흐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22일 오전 11시 청년이음전주에서 전주시 관내 대학교의 총학생회 임원진을 초청해 전주시의 주요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대학생 의견을 경청하는 '전주시-대학교 총학생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 정책 방향 공유 · 의견 청취

전주시, 도내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들과 간담회 가져

전주시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22일 오전 11시 청년이음전주에서 전주시 관내 대학교의 총학생회 임원진을 초청해 전주시의 주요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대학생 의견을 경청하는 '전주시-대학교 총학생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작년 7월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하고, 여러 분야의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왔다. 이날 행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대학생들과 청년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주시 관내 5개 대학 총학생회 임원 9명이 함께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학업과 진로,

취 · 창업, 주거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청년정책 수립과 개선과정에 반영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학생 총학생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년과 행정 간의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청년협의체'와 '청년정책 포럼' 등을 통해 정기적인 소통장구를 마련해갈 예정이다.

김은주 인구청년정책국장은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년정책에 적극 반영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 건립 순항

전주시 서부권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책임질 전주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교육과 돌봄, 문화, 여가 공간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전주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이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효자4동과 효자5동, 혁신도시 등 서부권에는 전주시 전체 인구의 17.7% (11만 687명, 2025년 12월 기준)가 거주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복지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부지면적 3,799㎡, 연면적 7,183㎡,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복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문화적 · 경제적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로 복원기금 7억3000여만원을 확보



해 차질 없는 공사 완료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관이 완공되면 내부에는 △지하 2층 주차장 △지하층 경로식당 · 북카페 · 주차장 △지상 1~2층 노인복지관 △3층 시니어클럽 △4~5층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갖추게 된다. 시는 운영 주체가 다른 각 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주민이 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자 복합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정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옥각

내야